

보도시점 (인터넷, 지면) 2026. 4. 13.(월) 14:00

##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위해 중앙·지방 총력 대응

- 시·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, 지방정부별 전담조직 구축, 지급수단 물량 확보, 찾아가는 신청 등 준비사항 점검 철저 및 신속 대응 당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10일(금) 국회에서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,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(월) 17개 시·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.
- 먼저,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「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」를 구성하여 지원금 신청·지급·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또한,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),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,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, 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,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·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  - 마지막으로, 금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,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하여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하였다.
- 한편,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4월 27일(월)부터 5월 8일(금)까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가구·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, 5월 18일(월)부터 7월 3일(금)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%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.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국민께서 신속하게, 또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빈틈 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”라며,
- “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,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서기관	조석훈 (044-205-3727)

